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상세 산정기준 상향입법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제2215983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상세 산정기준 상향입법(안 제49조의5) .. | 2 |
| ※ 참고자료 .....                                | 9 |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5983)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2.
3. 회 부 일 : 2026. 1.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 Ⅲ. 검토의견

#### 1.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상세 산정기준 상향입법(안 제49조의5)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시장안정기여금”)의 상세한 산정기준에 관한 현행법 시행령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sup>1)</sup>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5).

| 현행                                                                                                                                              | 개정안                                                                                                                                                                                                                                                                                                                                                                                                              |
|-------------------------------------------------------------------------------------------------------------------------------------------------|------------------------------------------------------------------------------------------------------------------------------------------------------------------------------------------------------------------------------------------------------------------------------------------------------------------------------------------------------------------------------------------------------------------|
|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u>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br><u>&lt;단서 신설&gt;</u> |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br>----- <u>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으로-----.</u><br><u>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u><br><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u> |
| <u>&lt;신설&gt;</u>                                                                                                                               |                                                                                                                                                                                                                                                                                                                                                                                                                  |

| 현행                                                                                                         | 개정안                                                                                                                                                                                                  |
|------------------------------------------------------------------------------------------------------------|------------------------------------------------------------------------------------------------------------------------------------------------------------------------------------------------------|
|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 <p>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p> <p>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부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현행법 제49조의5에 근거한 시장안정기여금은 택시의 과잉공급 상황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용으로 운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관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③·④ (생략)

리 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 중 하나임<sup>2)</sup>.

현행법 제4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안정기여금 산정액을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안정기여금을 운송매출액의 5%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으로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자동차 허가대수당 월 4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sup>3)</sup>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의 75%(허가대수 200대 미만인 경우) 또는 50%(허가대수 300대 미만인 경우)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 참조)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주요 사항 】

| 구 분   | 법률 규정                     | 시행령 규정 | 비고 |
|-------|---------------------------|--------|----|
| 부과주체  | 국토교통부장관<br>(법 제49조의5제1항)  | -      |    |
| 납부의무자 | 플랫폼운송사업자<br>(법 제49조의5제1항) | -      |    |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                                             |
|---------------------------------------------|
|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
|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분      | 법률 규정                                            | 시행령 규정                                                                                                                                                       | 비고                                       |
|----------|--------------------------------------------------|--------------------------------------------------------------------------------------------------------------------------------------------------------------|------------------------------------------|
| 용도       |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br>(법 제49조의5제2항)       | -                                                                                                                                                            |                                          |
| 부과금액의 산정 |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br>(법 제49조의5제1항) | -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br>- 사업자의 신청으로 운행 횟수당 800원이나 사업용 자동차의 허가대수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br>(시행령 제20조의7제1항) | 시행령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운송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산정액을 규정 |
| 부과금액의 감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75%(허가대수 200대 미만인 경우) 또는 50%(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감면<br>(시행령 제20조의7제2항)                                                            |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른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sup>4)</sup>,

####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같은 법 제4조<sup>5)</sup>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근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며,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부담금의 법률유보원칙<sup>6)</sup>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금액을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할 금액을 예측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송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안정기여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창업기업에 대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부담금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안정기여금의 상세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상향입법하고 있는 개정안은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함.

---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 등 국가권력의 발동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함.

다만, 시장안정기여금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할 경우 운송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운송매출액’, ‘창업기업’과 같은 산정기준 및 감면요건에 관한 항목과 부과금액의 상한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sup>7)</sup>.

【 부담금의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한 후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입법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p>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b>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b>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b>대통령령으로 정한다.</b></p> <p>④ ~ ⑥ (생략)</p> | <p>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p> <p>①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li> <li>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li> <li>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li> <li>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li> <li>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li> </ol> <p>③ ~ ⑧ (생략)</p> |

7)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국토교통 분야」(2025.12.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13호, p.39-42))에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을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사례로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 등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평가함.

## 나. 국토교통부 의견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다만,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 비율·납부액 등을 포함할 경우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기여금 산정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

## 참고

##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부과 현황

### □ 플랫폼운송사업자 현황

| 사업자명      | 서비스명    | 허가일자       | 허가대수 | 서비스내용                  |
|-----------|---------|------------|------|------------------------|
| 코엑터스      | 고요한M    | 2022.01.01 | 100대 | 청각장애인 고용을 통한 여객 운송 서비스 |
| 레인포컴퍼니    | LANE4   | 2022.01.01 | 220대 | 고급차량을 이용한 B2B 구독서비스 등  |
| 파파모빌리티    | 파파      | 2022.01.01 | 200대 |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등           |
| 피플모빌리티    | Beeline | 2024.01.15 | 30대  |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B2B서비스    |
| 블랙강남 모빌리티 | ㊸       | 2025.02.01 | 30대  | 강남·서초 구독회원 단거리 운송      |

자료 : 국토교통부

### □ 플랫폼운송사업자별 시장안정기여금 부과 현황(2025년도 1~3분기)

(단위: 원)

| 사업자명     | 분기    | 산정기준 | 감면율 | 부과액        | 비고      |
|----------|-------|------|-----|------------|---------|
| 코엑터스     | 1분기   | 매출액  | 75% | 2,341,783  |         |
|          | 2분기   | 매출액  | 75% | 2,833,815  |         |
|          | 3분기   | 운행횟수 | 75% | 2,637,600  |         |
| 레인포컴퍼니   | 1분기   | 운행횟수 | 50% | 5,958,800  |         |
|          | 2분기   | 운행횟수 | 50% | 8,462,000  |         |
|          | 3분기   | 운행횟수 | 50% | 9,194,800  |         |
| 파파모빌리티   | 1분기   | 운행횟수 | 미대상 | 37,071,200 | 대기업 계열사 |
|          | 2분기   | 운행횟수 | 미대상 | 37,120,800 |         |
|          | 3분기   | 운행횟수 | 미대상 | 33,319,200 |         |
| 피플모빌리티   | (미부과) |      |     |            | 사업개시 전  |
| 블랙강남모빌리티 | (미부과) |      |     |            | 사업개시 전  |

※ 산정방법: 매출액의 5%(신청으로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대수당 월 40만원으로 대체 가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창업기업(중소기업 사업개시 후 7년 이하)으로서 허가대수 200대 미만은 75% 감면, 300대 미만은 50% 감면

자료 : 국토교통부